

▶ 전북도의회 복지여성보건국 행감

정호윤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제각각”

최훈열 “복지법인 감독 강화”
 김영배 “노인복지 예산 증액”
 박재만 “군산전북대병원
 사업계획서 변경 문제점 점검”
 이성일 “청소년상담센터 부실”
 이호근 “기부식품제공 실적저조”



정호윤 의원



최훈열 의원



김영배 의원



박재만 의원



이성일 의원



이호근 의원

다르고 이동공동생활가정은 수당이 없다. 최훈열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이 110개소에 달하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매년 약 30여 개소밖에 되지 않아 관리·감독기능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도점검이 이렇게 적다보니 2014년부터 2015년도 지적내용이 정관관리 부적정 2건,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6건, 기본재산관리 소홀 2건, 이사회 운영 소홀 4건 등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3~4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받을까 말까 하는 현 상황은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부실운동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다 강화해 줄 것”고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도 노인일자리 사

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노인복지예산이 유독 많은 삭감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한쪽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바쁘고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군산시가 4억3,700만원을 삭감했고, 김제시 2억원, 장수군 17억원, 순창군 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은 군산전북대 병원 사업계획서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비 증가와 개발부지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 군산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의 상생발전 방안이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성일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

실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 감사관실 지적내용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승진임용 부적정, 임용자격 기준 미달자 채용, 퇴직금 관리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 도덕적 해이와 법적 기준 미달 사항이 많다”며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할 것과 처리 일시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호근 의원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예산 지원 대비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예산지원은 2014년 2억3,200여만원에서 2016년 4억 4,000여만원으로 약 18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식품 모집 및 이용실적은 2014년 56억여원에서 2016년 46억여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제점 파악과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야당 “우병우는 최순실 공범”

야당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와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범이고 우병우 전 수석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에서 소액주주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왔다. 제일 중요한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압수수색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국민의 분노를 불러온 황제수석은 말할 것도 없다”며 “검찰 곳곳에 포진한 우병우 사단이 증거인멸과 입 맞출 시간을 벌여주는 것이라 의심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면 원판은 우병우 전 수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우병우 구속수사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민주주의회 TF 소속 의원들이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박범계, 백해련, 진선미 의원.

안민석 “장시호, 대포폰 대통령 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비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가 대포폰을 개설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의 대포폰 중 하나를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 만약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시호의 소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받지 않아서 모르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유성엽, 국민의당 사무총장 임명

김관영 의원, 비대위원 인선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이 국민의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을 임명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유성엽 의원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또 김관영(재선·군산)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동철(4선·광주 광산갑)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추가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환 사무총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의투쟁이 창당정신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집회 참석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형 기자



김관영 의원

원외인사이자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이다.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유 의원은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의 3선 중진이다. 국민의당은 박 비대위원장 후임으로도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중진 김동철 의원을 인선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중진들과 협의를 해서 사무총장, 비대위원을 현역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역 호남의원들이 진출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